

# “불법이라서...” 타투이스트 갑질·폭력 ‘노출’

### 현행법상 불법이로 법적 보호장치 ‘전무’ 금전 요구·성추행 협박 등 악용사례 잇따라

광주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박모씨(29)는 최근 한 손님에게 타투 시술을 해준 뒤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내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시술 전 상의한 그림 그대로 작업했지만,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비용을 요구했더니 손님이 갑작스레 시술 중 무음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어 타투가 불법이라고 협박을 했었다”며 “결국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돈을 받지 않고 손님을 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SNS로 손님들과 소통하는 타투이스트 이모씨(27·여)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찍은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타투가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한 탓에 시술 중에 손님으로부터 농담을 가장한 성희롱 등을 겪어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때문이다.

이처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타투의 대중화로 인해 여성 타투이스트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성희롱·폭력·협박 등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술 종사자는 약 24만명이다. 이중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타투 시술 종사자는 약 700여명으로, 부업까지 합하면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투는 이미 대중에게 개성 표현 방식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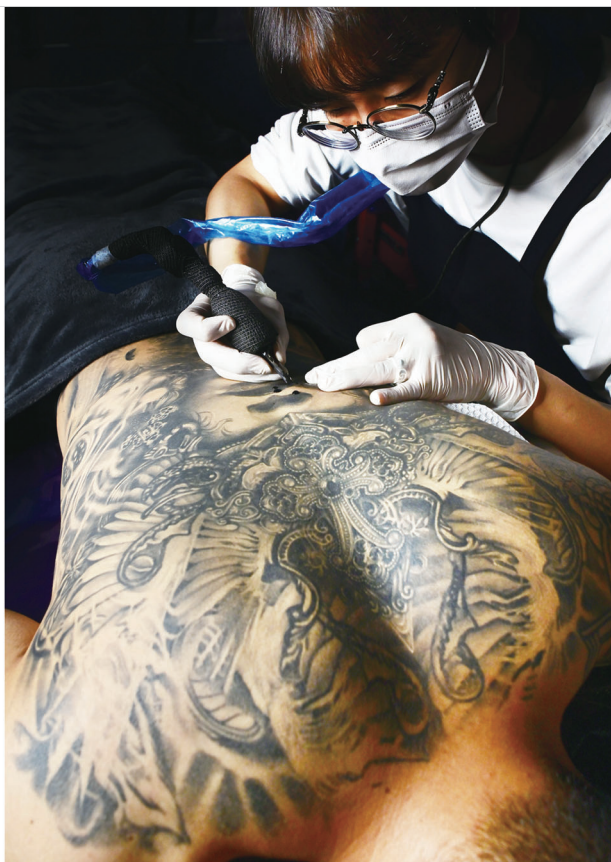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가 없는 이의 타투 시술은 단속 대상이며,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도를 넘어선 갑질, 성추행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여건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광주의 타투이스트 송모씨(27)는 “항상 손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악성 잡티 채 작업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송씨는 “손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도 원리원칙에 따라 맞대응할



**타투, 불법 vs 예술?** 눈썹 시술처럼 미용과 개성 표현 방법으로 몸에 문신(타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운데 9일 광주 금남로에서 다리에 문신을 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왼쪽)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정모씨가 사무실에서 등에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속해 타투이스트들이 협박성 금전 요구, 성추행 등으로 고통을 당하자 최근 국회의원들이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 법제화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태규 기자

수 없고 시술 전 적었던 시술 동의서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손님들의 갑질이나 협박 등이 악질적이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언제나 범죄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투이스트들은 음지에서 시술이 이뤄질수록 사고 위험과 우려 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타투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 체계와 위생 기준을 만들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법화한다면, 오히려 범죄와 사고 등도 줄어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송강섭 회장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타투술 신고제를 통해 법으로 관리한다”며 “위생교육 의무화 등을 안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한다면 각종 범죄와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20~25	순천	21~26	광양	21~25
나주	20~25	목포	22~25	여수	22~24

일출 06:11 일몰 18:47  
월출 09:20 월몰 20:52

장성	19~26	흑산도	22~26
담양	20~26	구례	20~25
화순	20~25	곡성	19~25
영광	20~26	완도	22~25
함평	20~26	강진	21~25
무안	20~25	장흥	20~25
영암	21~26	해남	21~26
진도	21~26	고흥	20~25
신안	22~25	보성	19~24

목포	만조 04:20 16:42	여수	만조 11:10 23:26
	간조 09:27 21:46		간조 04:47 17:0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광주 철거업체 현장소장 혐의 ‘부인’ “일방전축물 철거 지시할 위치 아냐”

광주 붕괴 참사 당시 이면 계약을 통해 건물 철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49)의 첫 재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백승건설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한술기업 현장소장, 현장 감리자와 공모해 ▲불실한 하부 보강 ▲건물 해체 방법 미준수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 과실을 저질러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철거 작업을 진행,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관은 한술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고 다원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공법을 지시했다는 재하청업체 작업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원이앤씨 측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방 밀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한술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 국민참여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나누시 자신의 집에서 B씨(80)와 싸

우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질식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사 사망하게 했다.

이후 B씨가 타고 왔던 트랙터를 멀리 옮기고 아들의 차를 이용해 인적이 드문 빈 창고에 시신을 숨겼다.

이날 밤늦게까지 B씨가 귀가하지 않

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B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수차례 찾아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도 B씨가 집에 찾아와 땅을 돌려달라며 폭행했고 자리를 피하자 계속 따라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머리 등을 폭행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반이들 이지 않았다.

실형 피해자의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제압했음에도 피해자의 목 앞쪽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10년 3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8년 1명, 징역 20년 2명, 무기징역 2명 등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는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살해 후 30분 만에 피해자의 트랙터를 은닉하고 시신을 차에 옮기는 등의 사절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저러 시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집입해 지체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2021 September 09

Vol.70

**커버스토리**  
김태봉 광주지법지정경찰위원회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특별 초대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집**  
신안 특산도 <상>

김태봉 광주지법지정경찰위원회 위원장

**커버스토리**  
“현장 목소리 반영...  
맞춤형 치안서비스 최선”  
취임 3개월째...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 · 자신감 생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1호 시책 주목 주민 참여 · 소통 활발 권위적 경찰상 탈색 계기 맞게 돼 장기적으로 자치 · 국가경찰 사무 담당 경찰조직 이원화해야

**[특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평범한 국민들과 위대한 변화를 이룩할 터”  
‘낮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 차별없이 들어야 남구 예지지벨리, 미래성장속 기대... 주민 주거 환경도 개선 지대대 경쟁력 제고 시급...대선 공약은 실천 가능성에 방점

**[플뿌리기초의원탐방]**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  
“주민들 가려움 끊어주는 속시원한 의원되겠다”  
동 명칭 · 구역조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 두각 청소년지도사 등 자기개발 속 지역사회 소통 주목 공약 이행 광복 · 도시재생 등 현안사업 해결 주력

**[한국의 명장]** 탕화장 현담스님  
조선 탕화 화맥 잇는 탕화장 천연석재 복원 위해 재료 · 기법 발굴 시대 반영에 로켓 · 핸드폰 그려넣어

**[가볼만한 곳]**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순수문학 이으며 전국 문학관 변역  
한국 순수 서정시의 진수 문헌해자에 ‘시문학’ 원본, ‘남의목’ 초간본 등 전시

**[이슈추적]**  
지역대학 위기, 해결방안은  
광주 · 전남 대학 ‘학과 신설’ 로 위기 대응 전남대 140명 조선대 129명 등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 원인...정원모집 미스매치 발생 광주시 · 전남도 유관 기관 등 협의체 구성

**팩트체크**  
GGM 신차 양산체제 돌입

**GGM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따끈한 신차” 출시 임박 현대차 위탁 생산 1000cc급 경형 SUV를 연말까지 4개월간 1만2천대 생산 목표

**건강백세**  
홍어와 경옥고  
시간의 미학

**경제인 인터뷰**  
영원한 안식처론  
때는 특별한 공간  
천지명례식당  
3,500평 규모 고급  
호텔식장시설 완벽  
마음은 함께 나누고  
힘은 일로 먼저 실천

**배창숙**  
천지명례식당 대표

**맛있는남도** 순천 웃장국밥  
깔끔하고 개운한 맛에 푸짐한 인심까지 돼지 찜자 아닌 돼지 머리 사용해 깔끔  
넉넉한 한 접시, 수육 · 순대 서비스로 즐겨 불거리 즐길 거리 가득 웃장 국밥 축제